여야 국감 후 극한 대치…11월 정국 '시계 제로'

지급 보증안·FTA·새해 예산안 등 쟁점 법안 공방 예상

직불금 국조 '정국 블랙홀' 가능성…정기국회 최대 난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침에 따라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 달 3~7일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가진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순항 전망은 높지 않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국감보다 더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야당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나와, 초당적 협력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안 처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은행지급 보증안은 세금으로 은행에 빚보증한다는 것으로, 이런 큰일에 대해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경제상황을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여야 합의대로 조속히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가 실현될 경우 직불금 파문은 순식간에 참여정부 5년 결산 정국으로 돌변할 수 있다.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

국조 착수전까지 정부가 국조특위에 제출토록 된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심자 명단을 바탕으로 특위가 조사 작업을 거쳐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공개키로 한 것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소득 전문직업인,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 공개 내용에 따라서는 정국은 일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마디로 럭비공처럼 파장이 어디로 튈 지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는 문제다.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강하게 추진중인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개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각종 감세 법안,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소위 '떼법' 방지법 등 각종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여당이 강행할 경우 또 하나의 큰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내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의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도 예상된다.

또 금융위기 상황 확산 여부에 따라 야당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 요구는 여권 내의 연말 개각론과 맞물려 복잡한 정치방정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정국 불안의 도화선이기도 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장 막말' 유인촌 장관 사퇴 공방

與 "민주당이 원인 제공" 野 "국회·국민 무시…사퇴해야"

柳문화 "심려 끼쳐 죄송" 공식 사과

정치권은 2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정감사장 막말'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유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유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성한 국감장에서 보여준 유 장관의 비이성적 태도는 그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겠다는 안하무인의 백미"라며 "팔짱을 끼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신재민 차관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정부의 공식 대변인을 자처하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에게 거친 몸짓으로 막말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와 언론을 모독한 유 장관은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유 장관의 발언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화살을 돌렸다.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 장관의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일국의 장차관을 대통령의 졸개나 하수인으로 모독한 것도 '의원 저질발언'의 금메달 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장관은 26일 '국감장 막말'에 대해 "국민과 언론인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취재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대해서는 "지금껏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서 물러날 때는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문화부에 대한 국감 때 사진기자들에게 "사진 찍지마, 아 씨,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노총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옛 삼복서점 입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靑 조찬 회동 불발

민주 "시정연설 前 부적절" 거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27일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 회동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전달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24일 청와대로부터 27일 조찬회동을 갖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대통령의 시정연설 바로 전에 조찬회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목적으로 조찬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급보증 문제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결국 청와대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재·보궐 당선 군의원 또 의원직 상실

영암 라 선거구 주민들, 3번째 선거 치러야 할 판

영암의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군의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3번째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영암 '라' 선거구(군서·서호·학산·미암면) 김모 군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군민 1천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다 적발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23일 대법원 제1 재판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당선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씨의 군 의원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모씨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군 의원직을 잃었는데 재선거 당선자마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허탈한 표정이다.

주민들은 "기초의원 선거를 3번씩이나 치러야 하다니 창피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영암군 '라' 선거구는 내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민주당 국감 성적표

임동욱
서울취재팀 차장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주 막을 내렸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국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향후 정치적 비전을 검증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심도 있는 정책감사보다는 주요 현안마다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가 하면 고성과 파행 등 구태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제1야당으로서 당찬 모습으로 수권 정당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국감 성적표를 받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비협조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쌀 직불금 파문과 국정조사 관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 국정원 정치 사찰 문제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길은 싸늘하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교과서 개편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못했다. 또 멜라민 파문도 '먹거리'라는 민감한 이슈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기존 전선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문제와 종부세 등 세제 문제 등도 민주당에게는 호재였으나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참여정부 심판'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방어에 급급하는 모습이 국감 현장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으로서의 '전투력과 패기'가 부족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과거와 같이 국감에서 정국을 뒤흔들 사건을 터뜨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초선의원들은 준비 부족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일부 다선의원들은 얌전한 질의(?)로 일관, 아직 '여당의 색깔을 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여권의 언론장악 논란을 놓고 여당과 첨예하게 맞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여당에 밀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나타났듯이 민주당의 무기력증이 쉬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차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세월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한 제1야당,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 등을 주축으로 이번 국감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